

‘정-천 연대론’ 솔솔... 새정치 ‘안방사수’ 비상

〈정동영-천정배〉

■ 전국 관심 부상 광주 서울 보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연대 가능성 열어나

새누리는 정승 후보 내정 ‘제2 이정현’ 기대

4·29 광주 서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나 ‘정-천’(정동영-천정배) 연대가 가시화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다 새누리당도 ‘제2의 이정현’을 노리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어서 새정치연합의 뒷받침에서 이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동영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모임’과 정의당이 이미 연대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전 전 의원이 비(非)새정치연합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선거구도가 사실상 새정치연합 후보와의 양자대결로 압축,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모임 인제영입위원장인 정 전 의원은 10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자후보론과 연대론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모임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무(無)공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 전 의원이 KBS 라디오에 출연, 국민모임과의 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광주에서 무기력한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야권을 변화시키겠다는데 동의하는 세력이나 인사들과는 얼마든지 힘을 합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광주의 정치혁신은 새정치연합의 심판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전 의원이 앞으로 정치혁신 의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할지 향후 행보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강은미 후보를 이미 공천

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쟁과 협력을 통해 광주에서의 정치혁신을 불러오기를 기대하겠다”며 전 전 의원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전 전 의원의 파괴력에 대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뒷받침’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실시된 당 자체 조사에서 전 전 의원이 새정치연합 후보군에 비해 오차범위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전 전 의원 동정론 확산 등을 경계하며 직접적인 네거티브식 대응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전 의원의 양자 대결이 이뤄지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도부까지 총 출동하는 등 대규모 물량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도 광주 서울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 새정치연합과의 일대일 구도를 벗어나게 되면서 구도가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순천·곡성의 이정현 의원에 이어 광주에서도 기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을 통해 광주 서구를 후보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처장은 오는 13일께 식약처에 사표를 제출하고 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정 처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까지 지내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 호남 지역을 관리해 왔다.

이런 가운데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10일 광주시의회에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사 부정청탁 등 위법부당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폭로했다. 고위 공무원이 직전까지 상사로 모셨던 처장(차관급)의 개인비리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정 처장 측은 조 전 원장이 해임에 대한 반발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원내지도부 주례회동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오른쪽 부터),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추궁에 임종룡 금융위장 후보 “송구스럽다”

유기준·유일호는 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예고된 대로 지난 2004년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6억7000만원을 썼지만 2억원으로 신고해 2700만원을 탈루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1985년 실거주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임 후보자는 수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필수 조건이 됐다”며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제가 20년간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

여러 번 문제 됐지만 이렇게 3분의 2 가 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 최악의 케이스”라며 “탈세 규모 보면 적극적 탈세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의 ‘정 피아’ 사외이사 등 정치금용을 비판하면서 민간금융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기존 쟁점 외에 추가 의혹은 없었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전문 지식을 쌓고 실무경험도 있고 후배들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 내정돼 긍정 평가한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 “개인적으로 모처럼 잘된 인사라 생각한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제회의를 열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주홍 “유권자 고향서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존폐위기에 처하는 등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에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 본인의 고향(등록 기준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회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전국 어디서든 선출할 수 있다”며 “현재에도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거주지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중간 합의’ 조율

대타협기구 구체화

일부 공무원단체 반발

활동 시한을 2주일이 남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중간 합의문을 조율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0일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려면 지금쯤

몇 가지 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검다리’ 성격으로 중간 합의를 하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열린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공무원단체의 거센 반발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간 합의문에는 애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합의문이 발표되더라도 다소 선연적인 문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을 현재 수준으로 둘 경우 향후 막대한 정부 보전금이 들어가는 만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맞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타협기구 여당 간사인 새누

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뤄진 의견 접근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남은 기간 어떤 방향으로 합의해 나갈지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물론 중간 합의문의 일부 표현에 일부 공무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간 합의문이 발표될 경우 새정치연합도 조만간 내부적으로 준비해 온 자체 개혁안을 대타협기구 분과위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제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연금 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광진 “문화재 도난범죄 공소시효 25년으로 연장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문화재 도굴·도난 범죄의 공소시효,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당한 후 오랜 시간 적발되지 않고 은닉·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 적발된다 할지라도 문화재를 직접 은닉하거나 유통한 사람만 처벌되고 애초에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훔친 사람은 처벌하



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문화재 관련 범죄는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적발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타 범죄와 다른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1위 최고의 새마을금고 2015 광주시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출시!!

각종 도·소매업/음식점
주점업/서비스업 등

식당, 학원, 노래방, 당구장,
카센터, 사진관, 컴퓨터수리,
세탁소, 세차장, 미용실,
피부관리, 방앗간, 스포츠시설,
PC방, 전통시장상인 등

연 이 율 1.25 ~ 1.4%

대출기간 3년/5년

최 고 2천만원

※36억 선착순 접수
(기존 대출자도 가능)

더 행복한 우리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